

이낙연, 국난극복위 차원 전국 순회

“권역별 경제 상황 점검·실태 파악” 내달 3일부터 충북 오송 방문 시작 차례로... 12일 전주시 방문

당권 도전이 유력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장이 내 주부터 전국 순회에 나선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차원의 지역별 민생현황 점검이지만, 전당대회 출마를 앞두고 전국 곳곳을 도는 일정 이어서 당권 도전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몸풀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18일까지 4회에 걸쳐 전국 주요 권역의 도시를 찾아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역 요청 사항을 청취하고 소상공인·지역업체 등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내달 3일 충북 오송시

(충청권)를 방문하는 것으로 첫 일정을 시작해, 8일 경남 창원시(영남권), 12일 전북 전주시(호남권), 18일 강원 원주시(강원권)를 차례로 돌 예정이다.

이 위원장측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각 권역별로 지원 요청을 청취한다는 것으로 지역업체, 소상공인 경제 상황도 점검하고 지원 현황 실태도 파악을 할 것”이라며 “국난극복위원회에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2일 국난극복위원회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방 현장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3차 추경 편성과 한국판 뉴딜 구체화에 도움

이 되도록 현장의 수요를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 차원의 일정이라고는 하나 공교롭게도 당권 도전을 시사한 시점에 전국 순회 계획을 잡은 것의 정치적 의미를 놓고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다.

홍영표 의원 등 당권 경쟁자들은 별다른 당직을 맡고 있지 않아 경선에 돌입하기 전 전국 단위의 활동에 나서기엔 운신 폭이 좁기 때문이다.

이 위원장은 오전 한국노총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출마 선언과 관련해 “3개월 전에 선언한 전례가 없다. 나중에 후보등록 할 때는 아무말 안 하고 하는가. 너무 몰고간다”며 “이렇게 됐으니까 (선언) 맡은

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전남 의원 워크숍 도중 내주 전당대회 출마선언 기사가 나간 후 “(보도가) 대체로 맞다”고 당권 도전 의사를 드러낸 데 비춰 재차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위원장은 오후 국난극복위 산하 일자리고용 TF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일자리와 하나라도 지키고 고용을 한 분이라도 유지해야 하고, 일자리를 잃거나 쉬는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줘야 한다.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에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믿음직한 언덕 될 것”

민주 이춘석 의원, 3선 의정활동 마무리



3선의 국회 의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민주 이춘석 의원의 의정활동이 3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시민으로 되돌아간다.

이 의원은 2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2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된다”며 “오로지 익산과 전북의 발전을 위해 달려왔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년은 전북과 익산의 도약을 위한 도출담기와 같은 시기였다”며 익산역 선상역사 건설, 중앙지하차도 개통, 국립 익산박물관 승격, 국가식품롤러스터 유치, 홀로그램 산업 유치 등에 앞장서 왔음을 회고했다.

또 “이번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과반수를 확보했다. 전북도민의 지지가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결과”라며 “이제 정치권이 화답할 차례다. 화합과 실천의 정치, 희망을 주는 정치로 거듭나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라는 직책은 내려놓지만 전북과 익산을 향

한 애정과 충심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랑과 지지 덕분에 정치적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었다”고 소회했다.

아울러 “12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고민해 왔던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안을 구체화 해 나갈 계획”이라며 “익산을 중심으로 한 호남권의 제2대도시권 구축이 바로 그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모든 지역에 고르게 N분의 1로 지원을 배분하는 분권 방식은 지방과 수도권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며 “선택과 집중의 지역정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더불어 “그러한 관점에서 교통의 관문인 익산은 호남권 제2대도시권의 중심도시로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이라며 “추후 전문가를 모시고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실행방안까지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무변촌이었던 익산에 내려와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던 그 시절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며 “어렵고 힘없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더 든든하고 믿음직한 언덕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익산=장영원 기자

정부 부처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 반납

청와대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중앙노동위원회 등 4개 기관 장·차관급 공무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반납한 급여 1억8165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4개 기관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 20명이 급여 30%를 반납해 조성된 1억8165만원을 근로복지공단이 운용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지난 3월 비상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정세균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들이 급여 30%를 4개월 간 반납하기로 결정할 때 따른 조치다. 청와대에서는 지난 26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급여를 근로복지진흥기금에 기부하기로 밝힌 바 있다.

청와대에서는 3~5월 반납급여를 기부했으며, 6월 급여분에 대해서도 추가 기부할 예정이다. 나머지 공무원들의 기부금은 지난 4~5월 반납급여다. 6~7월 반납급여 대해서는 추후 기부 예정이다.

기부금은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 140여명을 대상으로 자발적 참여로 조성되며, 최종 참여 인원과 액수는 유동적이다.

추후근로복지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이 지정기부금으로 기탁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 대책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뉴시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maeil.com



문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초청 오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에 앞서 김태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와

기분촬영을 하고 있다.

미래통합-미래한국 합당 선포

통합당에 의한 흡수통합으로 이뤄져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28일 국회에서 합당 선포식을 갖고 통합을 선언했다. 윤연동령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발해 미래한국당이 지난 2월 5일 창당한 지 113일 만이다.

합당 방식은 당초 한국당이 요구했던 당대당 통합의 신설합당이 아닌 통

합당에 의한 흡수통합으로 이뤄졌다.

당명은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별도의 논의를 거쳐 변경할 계획이지만 우선 선관위에는 당명을 ‘미래통합당’으로 등록했다. 사무처 소재지도 통합당의 서울 영등포구 당사 주소지로 등록했다.

또 합당수임기구 협의에 따라 합당 직후 당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맡고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종배 정책위의장이 당직을 유지한다. 공식인 당 사무총장은 당대표가 임명한다는 당헌당규를 따르기로 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인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당으로 미래통합당은 기존 지역구 84석과 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 19석을 합쳐 의석수 103석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177석)에 이어 원내 제2정당이 된다.

/뉴시스

“개원 협상 불가” 거듭 확인

민주, 국회 개원 앞두고 원구성 등 통합당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둔 28일 “정시 개원 당위성을 강조하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개원의 첫 걸음인 원구성을 놓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법정시한 준수를 밝히며 통합당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조속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다짐하는 한편,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단이 아닌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김태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총선의 민심은 새로운 국회를 만들려는 것이었다”며 “시대에 맞지 않은 관행과 폐

단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개원 법정 시한을 어기는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13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32년간 한 번도 정시 개원을 하지 못했다. 매우 부끄러운 일”이라며 “이번에도 지각 개원을 해서는 안 된다. 법에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개원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상임위를 배분하고 정해진 날짜에 개원해야 한다”며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일하는 국회’ 실현도 거듭 약속했다.

당내 ‘일하는 국회 추진단’ 단장을 맡고 있는 한정은 “이번 총선의 민심은 새로운 국회를 만들려는 것이었다”며 “시대에 맞지 않은 관행과 폐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